

KWDI 이슈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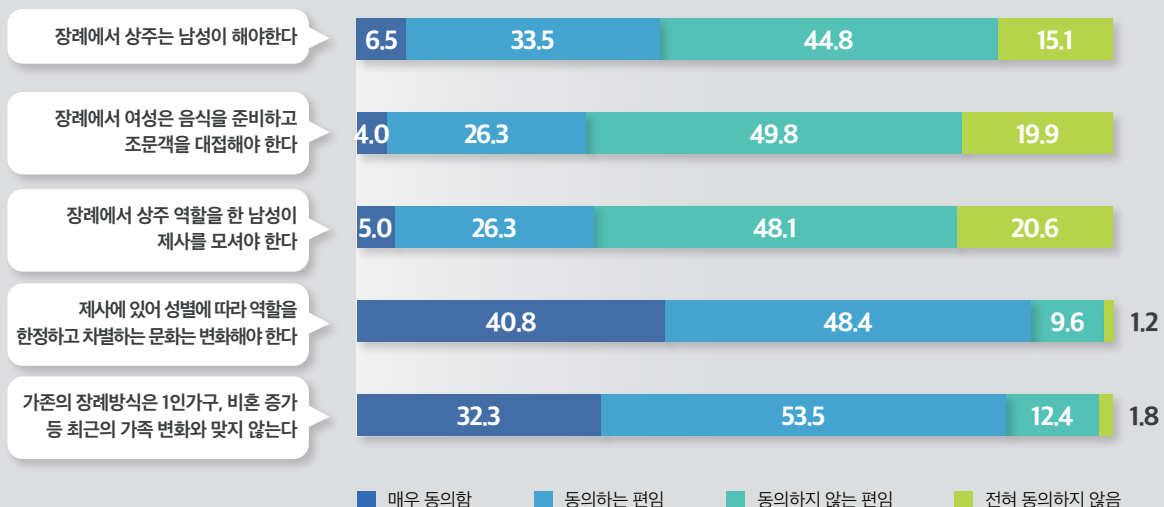
수행과제명 가부장적 가정의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송효진 연구위원 (Tel: 02-3156-7094 / E-mail: hjsong@kwidimail.re.kr)

한국 장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및 성평등한 장례문화 모색

초록

- 한국의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하여 ‘성 불평등성’과 ‘형식 및 절차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그 실태 및 대안 욕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장례문화에서 남성은 상주나 주요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하는 데 반해, 여성은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 이렇게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위계적인 장례문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장례문화는 변화해야 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가족 변화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 대안적인 장례문화에 관하여 응답자들은 성 불평등하고 허례허식에 치우친 현재의 장례문화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중심의 성평등하고 간소한 장례문화, 개인의 취향 중심의 다양한 장례문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으며,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응답이 일관되게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평등 관점 및 가족 변화의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제언함.

한국 장례문화의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단위: %)



1. 배경 및 문제점

- ✔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모든 절차와 의식에 있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성은 주변화되는 모습으로 가부장제가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성평등 문화의 수준과 동떨어져 있음.
- ✔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모습과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고 가족 문화와 가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남성과 아들 중심의 장례 절차만이 온전해 보이는 형식적 경직성은 이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음.
- ✔ 그러나 장례의 경우 장례 절차의 방식과 준비를 고인의 죽음 전에 가족들이 미리 상의하거나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그 안에서 가부장적 절차나, 성차별적 문화와 주변화된 여성의 역할에 대해 가족구성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 본 연구는 한국의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하여 그 실태 및 대안 욕구를 살펴보고 성평등 관점 및 가족 변화의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 한국 장례문화의 실태와 대안적인 장례문화 및 정책에 대한 인식 파악
조사 대상	• 20~50대의 성인 1,312명 • 최근 5년간(2014년 8월~2019년 7월)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으며, 장례경험에는 문상경험까지 포함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 조사
조사 기간	• 2019년 8월 20일 ~ 8월 30일 (9일, 공휴일 제외)

● 한국의 장례문화 실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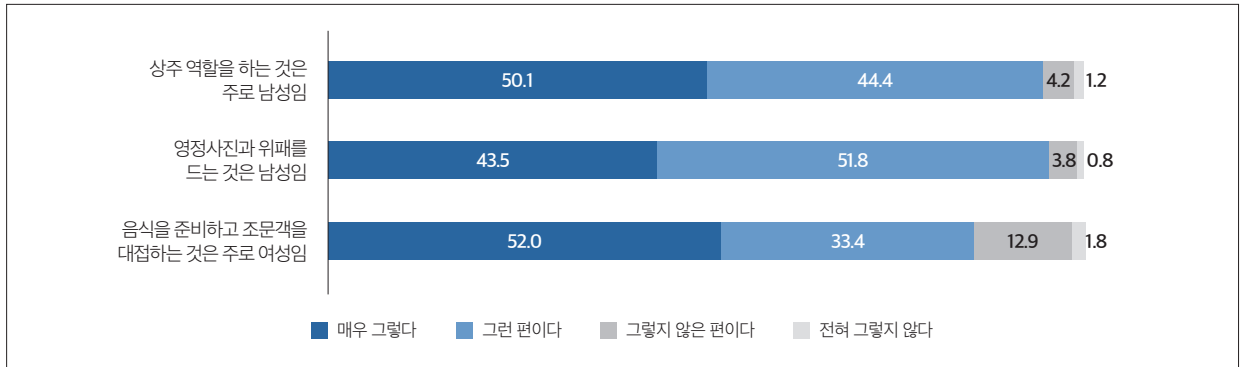
✔ 한국 장례문화의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 한국 장례문화의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면, 여전히 ‘남성’이 중심이 되는 장례식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

- ▶ 상주의 역할, 영정사진과 위패 들기, 의사결정 권한과, 상주 이후 제주의 역할까지 남성이 맡고 있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았음. 특히, 상주 역할과 영정사진과 위패를 드는 역할에 대해서는 약 95% 가량이 남성이라고 응답해, 압도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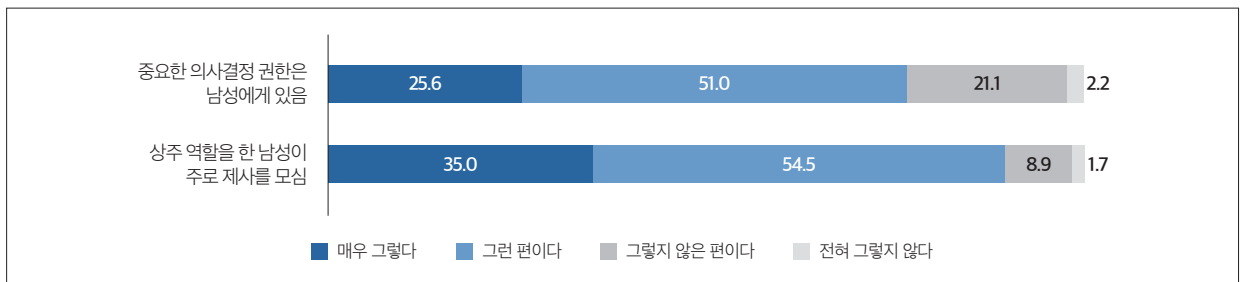
<그림 1>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 ①

(단위 : %)



<그림 2> 성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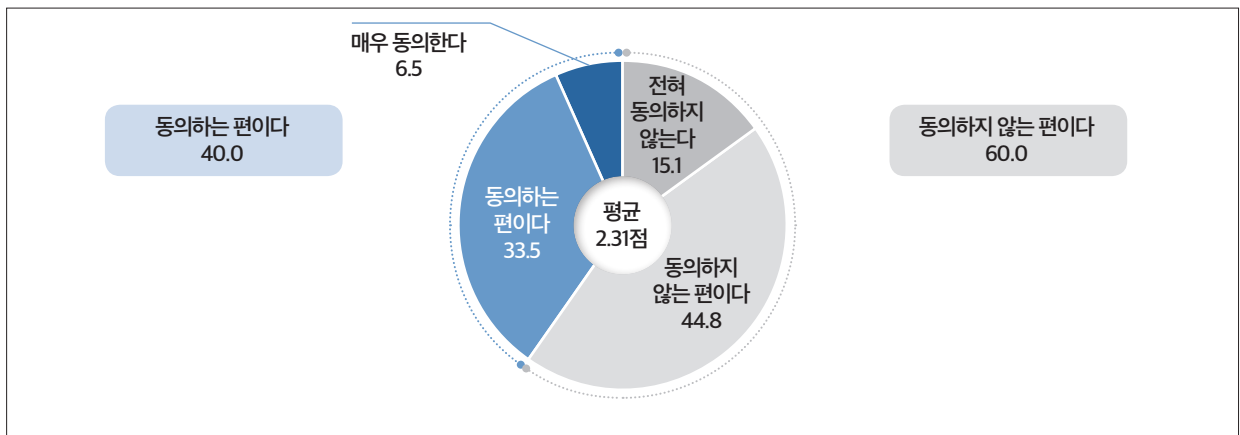
(단위 : %)



- ▶ 반면, 장례에 대한 기존 성역할 관련 태도에 대해서는 전 문항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해,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장례에서 상주는 남성이 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이 과반수를 넘어선 60.0%로 나타남.

<그림 3>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①장례에서 상주는 남성이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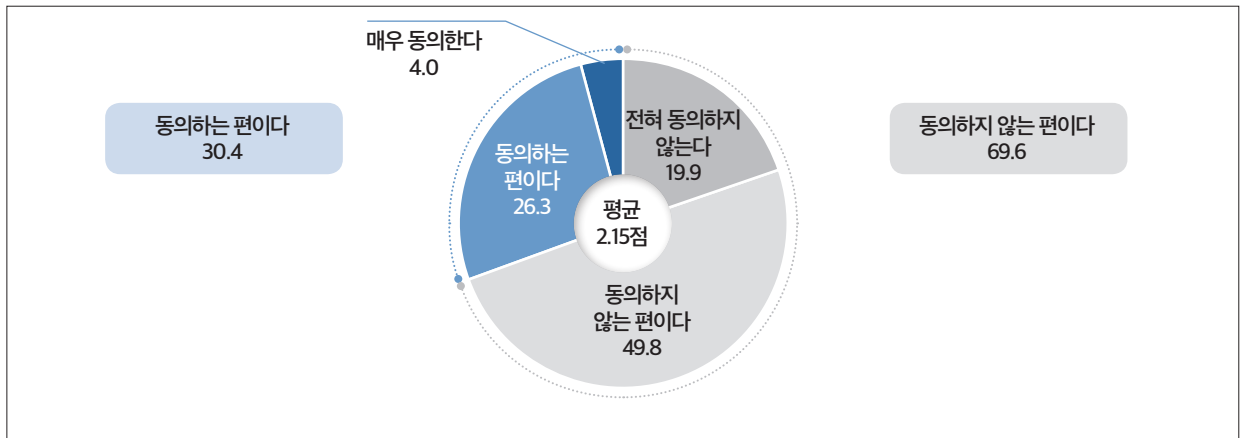
(단위 : %)



- ▶ ‘장례에서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69.6%로 더 높았음.

<그림 4>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②장례에서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대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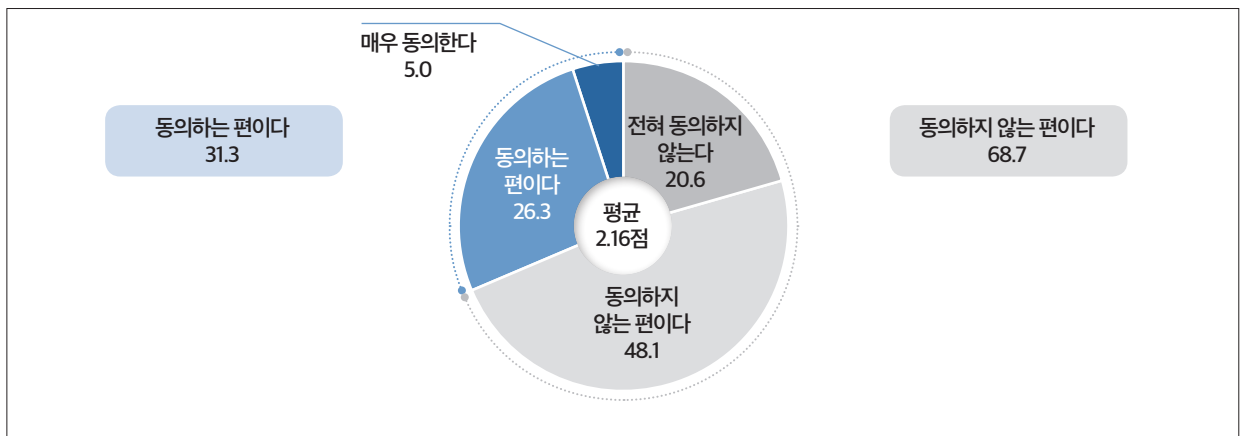
(단위 : %)



- ▶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한 남성이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6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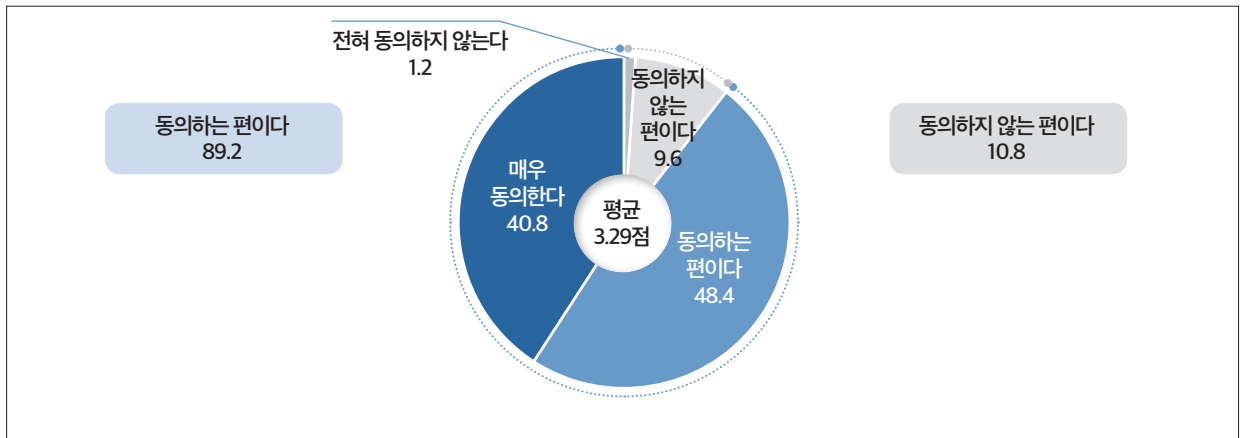
<그림 5>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③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한 남성이 제사를 모셔야 한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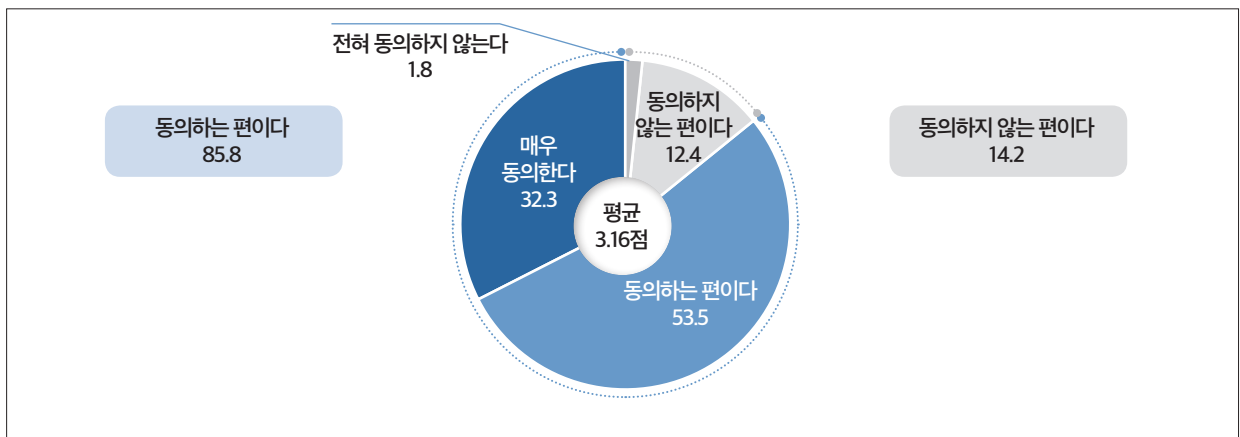
- ▶ ‘제사에 있어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문화는 변화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 ‘성차별적 제사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응답률이 90%에 가까워 상당히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6>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④제사에 있어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문화는 변화해야 한다 (단위: %)



- ▶ ‘기존의 장례방식은 1인가구, 비혼 증가 등 최근의 가족 변화와 맞지 않는다’는 진술에 대해 85.8%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림 7> 성 불평등성에 대한 태도: ⑤기존의 장례방식은 1인가구, 비혼 증가 등 최근의 가족 변화와 맞지 않는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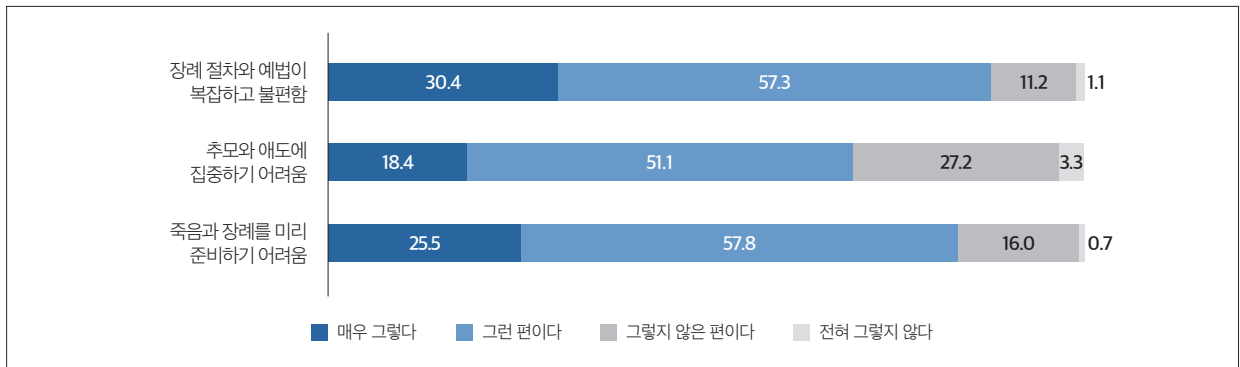


한국의 장례 형식과 절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 조사결과 장례의 형식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장례의 절차와 예법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응답이 87.7%,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한 문화와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83.3%로 매우 높았음. 즉, 한국 장례의 형식 및 절차 전반에 대해서는 허례허식에 치우쳐 의례의 본질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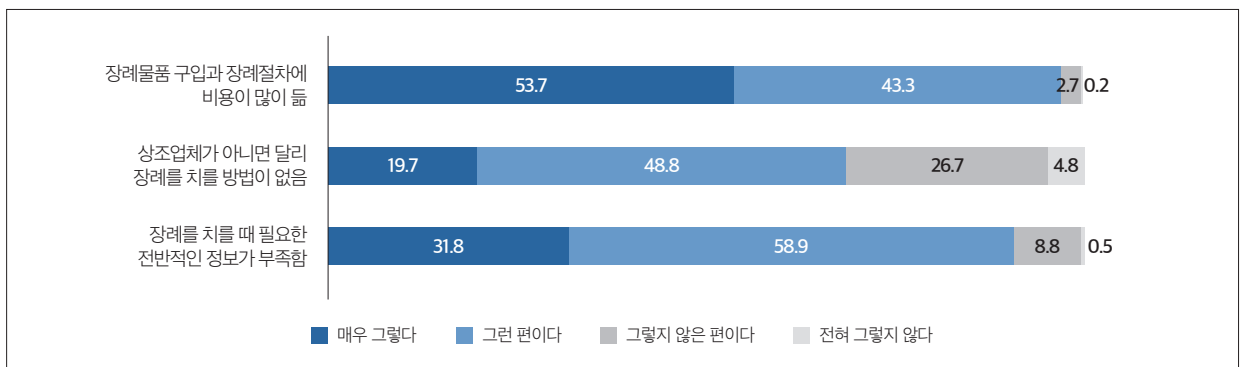
<그림 8>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인식①

(단위 : %)



<그림 9>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인식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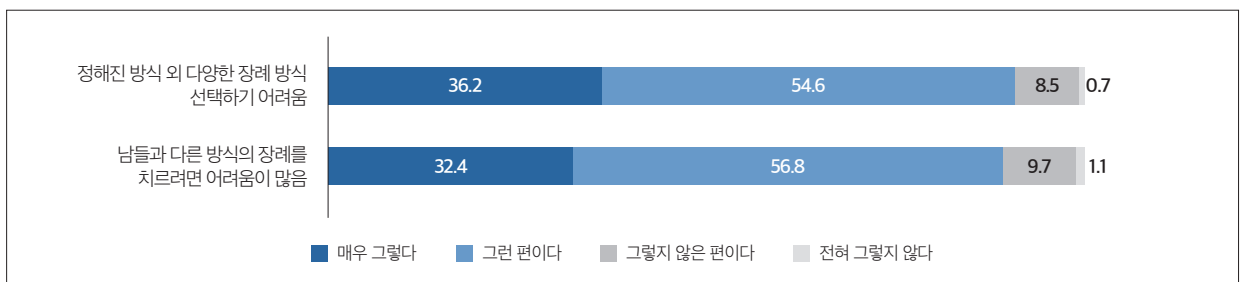
(단위 : %)



- ▶ 현재의 장례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매우 높아 현재 장례가 매우 획일화된 방식으로 치러진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정해진 방식 외에 다양한 장례방식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90.8%,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려면 어려움이 많다’는 응답이 89.2%로 나타남.

<그림 10>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인식③

(단위 : %)





성평등한 대안적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 ▶ 희망하는 장례문화에서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데 상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전체의 63.9%가 상주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36.1%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음.

<표 1>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시 상주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F/T값
전체		1,312	63.9	36.1	
성별	남성	672	71.6	28.4	34.780***
	여성	640	55.9	44.1	
자녀 유무	있다	671	66.6	33.4	4.243*
	없다	641	61.2	38.8	

주: *P<.05, **p<.01, ***p<.001

- ▶ 상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식에서 상주는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장남·장손이라는 응답이 36.9%로 가장 높았으나 근소한 차이로 ‘가족이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의견도 36.0%도 나타났음. 또, ‘고인과의 친밀도 순’(10.0%),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순’으로(6.8%) 등, 응답자들은 기존의 장례식에서 장남·장손으로 대변되는 남성 중심의 상주가 아닌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응답자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4.2%가 ‘장남·장손이 상주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여성의 경우 27.1%만이 ‘장남·장손이 상주를 해야 한다’고 응답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표 2>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식의 상주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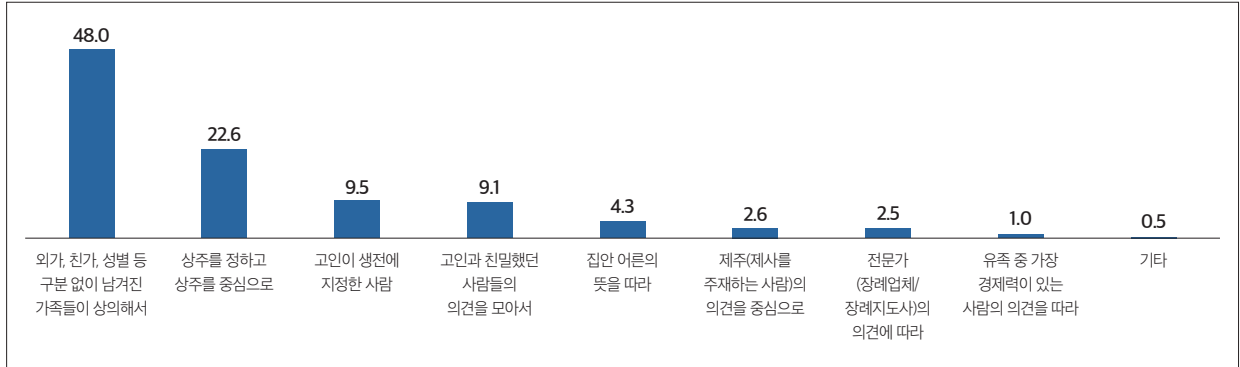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장남·장손	가족이 의논하여 결정	가족·친척 중 고인과의 친밀도 순으로	가족·친척 중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 순으로	가족·친척 중 남성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고인과 친했던 사람	가족·친척 중 가장 경제력 있는 사람	기타	F/T값
전체	839	36.9	36.0	10.0	6.8	5.5	3.2	1.4	0.2	
성별	남성	481	44.2	30.0	9.3	6.2	6.7	1.7	1.4	41.267***
	여성	358	27.1	44.0	10.9	7.6	3.8	5.2	1.4	
연령대	20대	197	25.8	39.0	11.5	10.5	5.4	5.8	1.5	59.305***
	30대	184	28.2	46.2	12.5	6.9	2.7	2.1	1.0	
	40대	223	40.5	32.6	7.7	7.7	6.2	3.3	2.1	
	50대	235	49.6	28.7	9.0	2.8	7.1	1.7	1.0	
결혼 상태	미혼	333	27.9	41.8	10.2	9.7	4.8	4.0	1.4	30.377**
	배우자 있음	477	43.1	32.3	9.7	4.8	5.6	2.9	1.5	
	이혼/별거/사별	29	39.6	29.0	12.0	6.3	13.2	0.0	0.0	
자녀 유무	있다	447	44.1	32.5	8.3	5.0	6.0	2.8	1.2	26.488***
	없다	392	28.7	40.0	11.9	8.9	4.9	3.7	1.7	

주: *P<.05, **p<.01, ***p<.001

- ▶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누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48.0%의 사람이 ‘외가, 친가, 성별 등 구분 없이 남겨진 가족들이 상의해서’라고 대답했으며, 2순위로 ‘상주를 정하고 상주를 중심으로’라는 의견도 22.6%로 나타났다.

<그림 11>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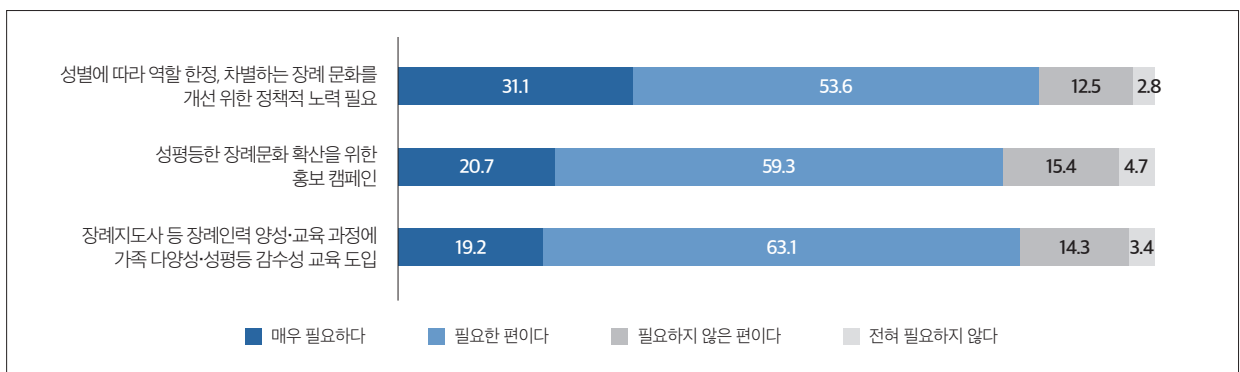


한국의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욕구

- ▶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차별하는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4.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음.
- ▶ 장례문화 개선 정책과 관련해서 필요도를 묻는 문항을 살펴보면, ‘성평등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0%로 나타났다. 장례지도사 등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가족 다양성·성평등’에 대한 감수성 교육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82.3%가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함.
- ▶ 즉,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성평등한 장례문화에 대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해당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그림 12>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성평등한 장례문화 관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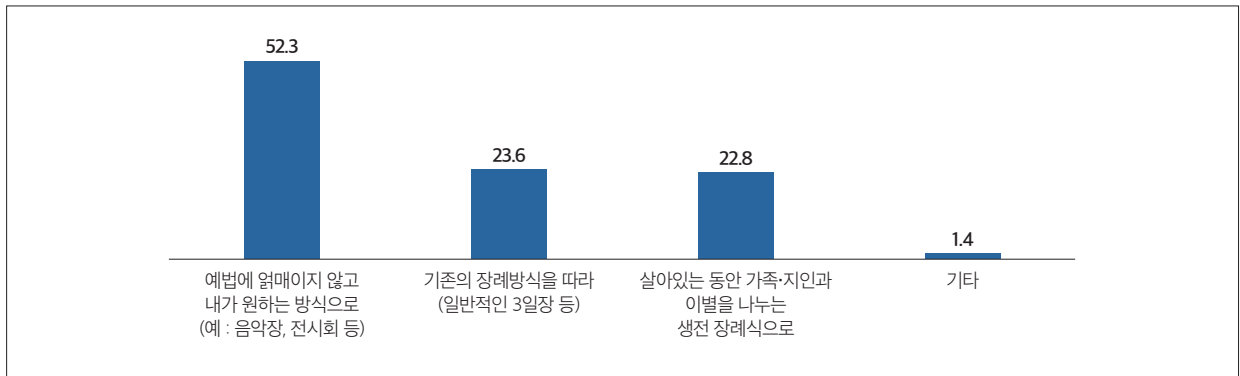


대안적인 장례방식에 대한 인식과 태도

- ▶ 본인의 장례식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물어본 결과,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예: 음악장, 전시회 등)’가 52.3%로 과반을 차지한데 반해, ‘기존의 장례방식을 따라(일반적인 3일장 등)’하고 싶다는 응답은 23.6%로 약 ¼에 불과했음. 또한, ‘살아있는 동안 가족·지인과 이별을 나누는 생전 장례식으로’ 하고 싶다는 응답도 22.8%를 차지하여, 기존의 장례방식과는 다른 자유롭고 새로운 형식에 대한 요구가 약 75%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3> 희망하는 장례방식: 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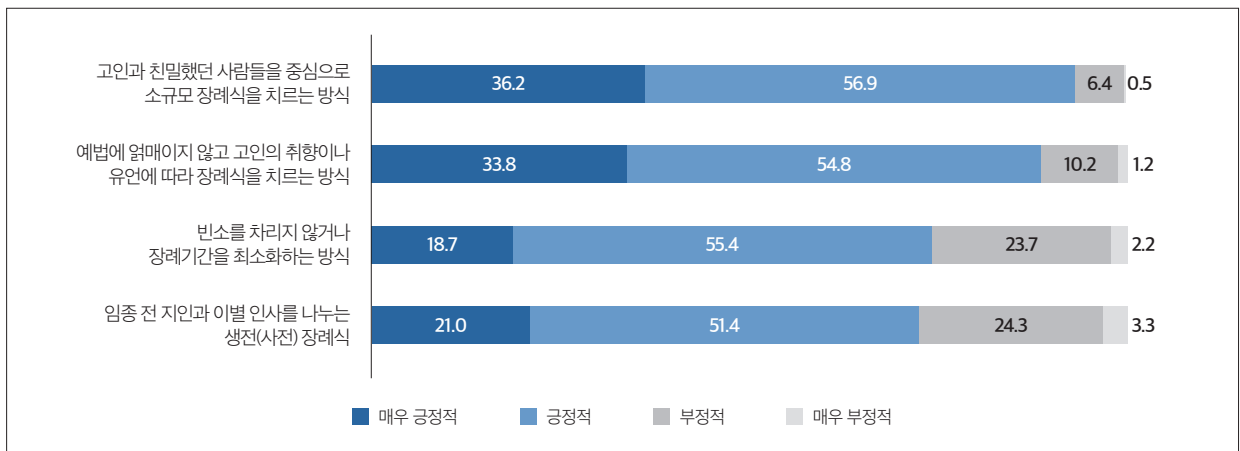
(단위: %)



- ▶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를 치른다면 기존과는 다른 대안적인 장례방식 중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하여, ‘고인과 친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장례식을 치르는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93.1%로 가장 높았고,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고인의 취향이나 유언에 따라 장례식을 치르는 방식’이 88.6%, ‘빈소를 차리지 않거나 장례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74.1%, ‘임종 전 지인과 이별 인사를 나누는 생전(사전) 장례식’이 72.4% 순으로 나타났음.
- ▶ 친밀한 관계 중심의 간소한 장례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가운데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다양성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4> 희망하는 장례방식: 사랑하는 사람·가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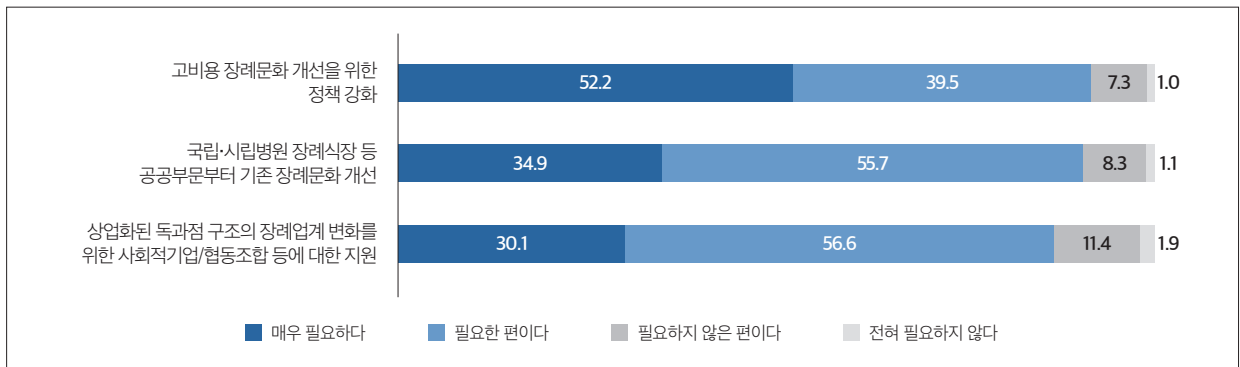


장례문화의 형식·절차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욕구

- ▶ 장례문화의 형식·절차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 ‘고비용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장례용품 가격 등 정보공개 강화, 간소한 장례식 정보 안내 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91.7%를 차지했음.
- ▶ ‘국립·시립병원 장례식장 등 공공부문부터 기존 장례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90.6%가, ‘상업화된 독과점 구조의 장례업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86.7%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그림 15>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장례서비스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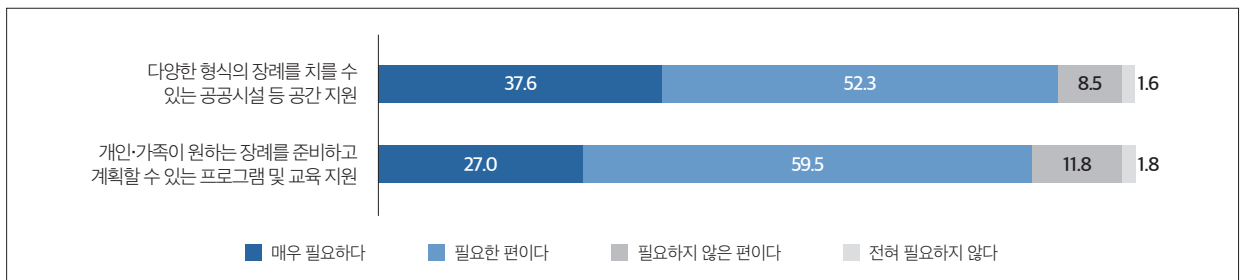
(단위: %)



- ▶ 획일화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형식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공시설 등 공간지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9.9%로 높았고, ‘개인·가족이 원하는 장례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에 대해서도 86.5%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그림 16>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다양한 장례문화 관련

(단위: %)



- ▶ 대안적인 장례문화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도 현재 한국의 장례문화의 실태와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즉, 응답자들은 성 불평등하고 허례허식에 치우친 현재의 장례문화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중심의 성평등하고 간소한 장례문화, 개인의 취향 중심의 다양한 장례문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음. 이런 괴리를 반영하듯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응답이 일관되게 매우 높게 나타났음.

3. 정책제언

- 장례인력 양성과정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 포함(장사법 시행규칙 별표2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가족 다양성 및 성인지 감수성 내용 반영, 성평등 관점 및 가족 변화 반영 표준교육교재 보급 등)
-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대안적 장례 콘텐츠 개발
-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 가부장적이고 성 불평등한 장례문화 관련 법제의 개선
- 성평등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최소한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추모 보장
- 가족관계 변동에 따른 기존의 제도 밖의 다양하고 새로운 관계의 당사자들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지막 돌봄으로서의 장례와 추모의 기회를 허용(혈연과 법률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중심의 장례 관련 법규-장사법상 무연고 장례 규정, 의료법상 사망진단서 교부 범위 규정 등 개선)
- 비혼, 1인 가구, 제도 밖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죽음 이후 장례 등을 부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편의를 제공(후견제도, 사후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등 보완)
- 죽음과 장례에 관한 일상적 준비를 지원하는 사회분위기/문화 조성 및 고비용 장례문화 개선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